

학생 2명 야간 교무실 잠입...교사 컴퓨터 해킹해 유출



고교 시험지·답안지 유출 수법 보니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광주일보 7월 26일자 6면)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이 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야간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이다. 이들은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시험 문제와 답안이 담긴 문항정보표 등을 훔친 고교 2학년생 A·B군 2명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13일 치러진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앞서 시험 출제 기간인 지난 6월 말, 교사들이 퇴근한 야간을 틈타 학교에 잠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면 캡처 저장 프로그램 설치

3일 뒤 다시 와 파일 담아가

학생들 평소 내신 2~3등급 유지

“성적 올려 좋은 대학 가고 싶었다”

경찰, 중간고사 유출 의혹도 수사

교내 계단을 통해 교무실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을 넘어 외벽 난간에 올라다 교무실까지 이동했다. 이후 열려 있던 외벽 창문을 넘어 교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교장실·행정실·컴퓨터실에는 사설 보안 업체의 보안 장치들이 있었으나, 정작 교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A·B군은 들리지 않고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A군이 교무실 주변 망을 보는 사이, B

군은 교무실을 돌며 교사 업무용 컴퓨터(노트북) 여러 대에 외부 저장장치(USB)를 꽂아 미리 준비해둔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해당 악성코드는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 파일로 남겨 특정 폴더에 저장했다. 프로그램은 B군이 직접 제작했는데, 기존 화면 캡처 프로그램의 코드를 일부 수정해 악성코드로 활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B군은 3일 뒤 다시 교무실을 찾아와 USB에 사진 파일들을 담아가 갔다. 수분 가격으로 화면을 찍었던 터라 수천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는데, 이 중 문항정보표 등 필요한 사진만 선별해 가져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렇게 답안지가 유출된 시험 과목은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Ⅱ, 생명과학Ⅰ 등 최소 4과목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험기간이 되자 이들은 답을 미리 외운 뒤 시험을 봤다.

A군은 외웠던 답을 시험지 귀퉁이에 적어 두었다가 시험이 끝나면 찢어서 버렸다. 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학생들이 휴지통을 뒤져 쪽지를 퍼들 맞추듯 복원하면서 범행이 들들났다. 복원한 쪽지에 개입같은 숫자도 해당 과목들의 답안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내신 2~3등급을 유지하던 학생으로, 평소에도 성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B군은 같은 학교 다른 반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교무실 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교사나 학부모가 연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B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중간고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출제용 PC 관리 허술...교무실·복도엔 CCTV도 없어

부실한 교사 관리 시스템

교무실 이전 후 4개월 보안 방치

잠겨있지 않은 창문 통해 침입

4년전 시험지 유출파문을 일으켰던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서부경찰은 26일 “학생들이 심야에 난간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교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1차 범행을 할때도 잠겨있지 않았던 교무실 창문은 2차 침입에도 여전히 열린 채 방치돼 있었다.

시험 출제 기간에 보안시설로 관리해야 할 교무실 창문이 무방비 상태였다.

교사들은 외부 저장장치(USB)에 시험지를 저장하고 PC에 정보를 남기지 않아 유출 염려가 없다고 믿었지만 정작 기본적인 방범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손쉽게 교사들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교무실 안팎은 물론 복도에도 출입자를 체크할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시 장치도 없었다.

교무실은 원래 2층에 있었으나 지난 2월 고교학점제 교실조성사업 과정에서 4층으로 이전한 후 감시장치 등 보안 강화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다.

교직원의 허술한 보안의식도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사들은 시험 기간 출제에 사용하는 노트북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학교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집에 가져가는 방식으로 관리, 취약한 보

안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외부로 반출할 경우 분실, 도난, 유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다.

교사들의 일일한 보안관행과 시험 출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있던 학생들은 손쉽게 답안지를 빼내는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었다.

결국, 4년 전 시험지 유출로 충격을 치르고 구축한 교사 관리체제도 기초부터 지체되지 않은 내부 보안의 허점 때문에 허망하게 무너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범행할 수 있었던 데는 허술한 보안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가 전 과목 시험문제가 유출돼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행정실장은 운영위원회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학교 인쇄실에서 시험지를 빼내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승인 받지 않고 학교 이전 추진

전남교육청, 순천 사립학교 고발

순천의 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 이전을 추진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순천의 A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A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부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 교육청은 또 일부 용역 계약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 부지를 선정할 뒤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교육청에 이를 알리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학교 이전을 위한 이사회도 약식으로 진행하는 등 심의도 부정적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교육청 감사에서 “양해각서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재시험 가능성 높아...학교성적관리위서 최종 결정

기말시험 어떻게 되나

학생·학부모 이의 제기 잇따를 듯

광주 A사립고교가 시험지와 답안지가 유출된 2학년 1학기 기말시험을 다시 치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정한 2022학년도 광주시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제12조·문제 출제)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재시험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 지침이 있지만 재시험 여부에는 학교의 결정사항으로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학교는 4년전 시험지 유출 파문 당시에 재시험을 치른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학년 전체 189명이 응시하게 돼 재시험 유불리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수험 피로도 누적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일단 답안지 유출 의혹이 경찰의 수사도 밝혀짐에 따라 재시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재시험 여부에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기말 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답안지를 빼돌린 학생들은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규칙’(징계의 기준)에는 ‘시험 중 부정행위 기담 및 범조는 교내분사, 사회봉사 처분을 받도록 돼 있고,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의 경우 출석정지에서 최대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며 “재시험을 치르는 문제는 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앞에서 진행된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애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시험 관리를 허술하게 한 학교와 시험지를 빼돌린

학생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나온다.

3학년 학생 B군은 “이번 사건으로 학교 위상이 떨어지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 진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수시를 준비 중인 3학년 친구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학년 학생 C군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부정행위를 저지르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학교 앞에서 만난 시민 정혜진(38)씨는 “내 아들은 이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불공정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크다”며 “학교 보안이 뚫렸으니 학교측 잘못도 크다”고 말했다.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6434	1	화순군 화순읍 칠송로53, 103동 5층 502호 [대광로제비방] 40.56㎡	아파트	86,000,000	관리비2022.2부터 미납원상대
	2	북구 매곡로54, 1동 11층 1206호 59.94㎡	아파트	111,000,000	
2022타경 6474	1	화순군 무정면 봉안리 13-4 538㎡	대	869,199,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목책7공부상지목*담*이나 현황*중중지*임, 목책7농지취득지격증명요, 목책4건물소재지번별안리
	2	화순군 무정면 봉안리 13-6 811㎡	대	869,199,200	목책7농지취득지격증명요, 목책4건물소재지번별안리
2021타경 70487	1	화순군 무정면 봉안리 701-26(제1동) 1층7 9.41㎡ 2층 15.66㎡ 제시외 창고 등 21.2㎡	단독주택		
	2	화순군 무정면 봉안리 701-26(제1동) 1층7 9.41㎡ 2층 15.66㎡ 제시외 창고 등 46.5㎡	단독주택		
2021타경 5827	1	화순군 무정면 봉안리 10-1 170㎡	도로		
	2	화순군 무정면 봉안리 10-2 137㎡	도로		
2022타경 2030	1	화순군 동북면 한천리 122-2 272㎡	대	184,158,3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목책3건물은목책1차에 일부소재
	2	화순군 동북면 김삿갓로 701 86.0㎡ 제시외 주택 등 190.7㎡	대	184,158,300	
2022타경 63578	1	담양군 창평면 의암길 535-4 563㎡ [공유자나정래/34지번전부]	대	16,253,69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지번매각, 공유자수전매수권1회제한
	2	담양군 창평면 의암길 13-6 81.18㎡ 부속 건물 단층 [창고, 문간, 헛간, 축사, 퇴비사] 58.32㎡ 제시외 가차 16.2㎡ [공유자나정래/4/34지번전부]	대	16,253,69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지번매각, 공유자수전매수권1회제한
2022타경 454	1	광산군 남산동 200-1 1310㎡ 제시외 잔디 398.15㎡ [오상근/27공유자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식재면제외잔디포함 [채우자매각지번제한함]]	대	37,650,55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제한
	2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831-6 3991.9㎡ [공유자장병근1/5지번전부, 공유자나건용4/5지번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대	37,650,55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제한
2022타경 2580	1	광산군 연산동 1279 3234.7㎡ 제시외 창고 2㎡	대	67,862,300	목책1토지일부소
	2	광산군 연산동 1279 3234.7㎡ 제시외 창고 2㎡	대	67,862,300	현제정지목에서 축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대수권인양매각대상지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공매처에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공유자 지분증명서류제출을 위한 경우 그 공유자 중 최초로 집행되는 매각이행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수보증금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행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있을 경우 최초매각기일 : 2022. 8. 10. [수] 10:00
- 매각물건기일 : 2022. 8. 17. [수] 16: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 매각방법
-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일입찰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서류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효력은 최고매각가격의 1% [미리미리]에 해당하는 공매처에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제출을 제공한 문서 [공용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목적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서류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례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대수권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로 상호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대수권인과의 차순위매수권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물자가 출찰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가격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가격의 10% 이상으로 결정하고, 매각가격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지 3일간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 입찰한 대금지급기한 지 매각결정일로부터 매각가격의 10% 이상으로 결정된 날에 결정금까지의 차액금에 대하여 매각가격의 10% 이상으로 매각가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과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통상 매각한 매각가격에 비추어 매각가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기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차등금, 기입비용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에 관하여는 매각결정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입찰행위의 효력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가격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현재, 현행소재지소재 및 결정금까지의 차액금에 대하여 매각가격의 10% 이상으로 매각가격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가격의 10% 이상으로 매각가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과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통상 매각한 매각가격에 비추어 매각가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기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주의사항
- 매각의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목적전입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업 자득목적용을 위한 입찰인인 것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동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입찰행위의 효력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가격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현재, 현행소재지소재 및 결정금까지의 차액금에 대하여 매각가격의 10% 이상으로 매각가격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가격의 10% 이상으로 매각가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과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통상 매각한 매각가격에 비추어 매각가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기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찰행위에 나옴을 설명하는 입찰자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동의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도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정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요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대수권인으로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도시지역확정확정인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공고된 물건의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서 취지되거나 집행이 취소, 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이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및 입찰에서 제외된다.
- 신변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면전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결정일에서 통상 통상조서시 변경한다.
- 입찰보증금 납부후에 매각가격이 매각가격을 초과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음.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섹션]
-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에 열람 할 경우 정보의 발송을 제공하며 열람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명령을 위하여 따로 제한할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사유를 매각처에 신고하여 신고인사나 신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순회 배상 신청 등 수 있으므로, 관할하는 물건을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가격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일에서 통상 통상 조서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7. 2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배